

1백만 영·유아 대난방치

보육시설 이용아동 4만7천명 불과

대부분 영세가구 취업모 자녀...정부탁아혜택아동 1%뿐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다니는 숫자가 늘고 농업에서도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져 감에 따라 탁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아동방

치가 큰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5면>

보사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취업모의 0세~5세 아동 1백92만여명 중 보육대행자가 있는 아동을 제외한 1백8만여명이 보육대상아동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90년말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겨우 4만7천5백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이 밝혀져 1백만 이상의 아동들이 방치 또는 준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을 통해 이들 중 25%인 25만7천명에 대해서만 보육시설확충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나머지 75만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탁아관계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대책은

반드시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온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0년 현재 탁아대상어린이 중 정부의 탁아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1%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92년까지 생활보호 및 의료보조대상자 아동 8만7천명에 대한 보육지원 계획만 있을 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일반저소득층의 취업모자녀에 대한 지원계획은 턱없이 미흡해 이들 아동의 방치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사부의 계획이 탁아를 복지차원에서보다는 가정탁아 등 시장경제원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탁아의 영리화에 따른 문제점도 크게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탁아비용부담이 취업모에게 전가되어 아동방치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탁아소연합회의 김경태 회장도 "기혼여성을 썩 값으로 부려먹으려는 현사회구조 속에서 또다시 자본주의식 장삿속이 우선하는 탁아제도가 일반화 된다면 보육의 질도 문제이겠거니와 그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업모의 아이는 또다시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을 우려했다.

보사부는 ▲92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8만7천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확충 ▲95년까지 빈곤선(평균 가구소비지출 50%)이하인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확충 ▲2천년까지 평균가구소비지출 60%이하의 저소득층 보육대상아

동에게까지 정부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33000
4.